

# 공급 넘치는데 고공행진...광주시, 아파트값 잡기 총력전

### 6월 이후 상승세...향후 10년 신규 공급 예정 물량 14만세대 청년·신혼부부 등 공공형 아파트 확대·투기세력은 집중단속 남구 에너지 벨리에 무주택자 위한 '누구나 집' 750세대 조성

광주시가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에도 전정부지리 지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집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집 마련이 버거운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형 아파트를 확대하고,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선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주택 보급률은 2019년 말 기준 107%로 2030년이면 1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년간 공급될 물량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1만 2754세대, 재개발·재건축 3만 6562세대, 신규 택지개발 2만 9343세대 등 14만 세대에 달한다.

공급이 이처럼 넘치는데도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 인상은 지난해 12월 1.29%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가 지난 6월 0.81%, 7월 0.86%, 8월 1.01%, 9월 0.97%로 반등했다. 지난 9월 기준 광주지역 신축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1431만원으로, 도시규모가 큰 부산(1438만원), 인천(1424만원), 울산(1420만원)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84㎡형 기준 봉선동 제일풍경채(10억5000만원),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9억1000만원), 화정동 영주 더샵센트럴파크(8억9000만원) 등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 인근 신축 아파트들도 이미 평

당 2000만원대를 넘어서면서 84㎡형 기준 7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중앙공원 1지구 내 롯데건설 명품 브랜드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870만원으로 확정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과도한 가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는 최근 아파트 오름세의 원인 중 하나로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 정보 차단'을 지목하고, 내년 1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민간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이 재산증식이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장 교란 행위로 단속한다. 광주시는 실거래 의식 자료를 조사해 편법 증여, 탈세, 전매제한 위반 행위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의식 사례 720건을 조사해 157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10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전매제한 위반 등 1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1주택자인 실수요자가 집을 사고 파는데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 지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핀셋 지정·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집없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겐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 집'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차 사업으로 남구 에너지벨리에 누구나 집 750세대를 마련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해 시세의 85~95% 수준 임대료로 10년간 산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결정해 분쟁을 막고 확정 분양가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다. 시세 5억원 상당 34평형 아파트라면 5000만원을 내고 입주하고 2025년 예정

인 입주자 모집 때 미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분양가에 계약해 2035년 해당 가격에 분양받게 된다. 우선 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평생 주택, 누구나 집 등 2030년까지 공공 주택 1만 8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형 평생 주택' 시범 사업으로 옛 삼무 소각장 인근에 460세대를 이르면 2024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또 첨단 3지구에 2300여 세대를 2026년까지 조성하고 산정지구, KTX 선도지구 등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추가로 공급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우섭 광주시장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었는데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는 여전히 집 사기 어렵다"며 "이분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분양 주택이 아니라 공공 주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피라그라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거칠어진 '홍남기 때리기' 민생 힘 신고 문 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 민주당 지도부 가세 연일 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다시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홍남기 때리기'에 가세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문제는 당정보다는 여야의 논의가 우선이라며 확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움직임은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논의하는 예산 정국을 맞아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공약을 관철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낮춘 것을 두고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며 기재부의 예산 권한 분리를 언급했다. 대형유통기업이나 카드사 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거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16일 YTN 라디오에서 정부가 올해 세수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기재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기에는 민생 이슈의 주도권을 잡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차별화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지지율 회복의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도 감지된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도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 정부 정책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선대위 회의에서는 "청년이 희망을 잃은 데에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

다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현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호 후보에게 뒤지지만,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내주나 이달 말께에는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겹치고 비등한 구도로 재편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을 둘러싸고 당정 간의 충돌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는 "지금은 당정 간의 논의보다 여야 간 논의를 우선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을 향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지나친 압박을 그만두라는 촉구성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여당이 정부에 각을 세우는 모습이 계속 노출될 경우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결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청와대 정부수석은 16일 MBC 라디오에 나와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입장차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청와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여당이 여야 간 논의를 뒤로 한 채 지금 홍 부총리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특히, 청와대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류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현재의 당정대립이 대선 전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으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문 대통령 탈당 선그은 청와대...직선제 이후 되풀이 된 '흑역사' 끝나

청와대가 16일 차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부수석은 16일 MBC 라디오에 출연,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문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 "책임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당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대통령들의 탈당 사례에 대해 "여당을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정략적 의

도"라며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중반의 국정지지를 기록하는 등 이전 대통령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의 '결별'이 내년 대선 판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당정 갈등을 부각시키며 마이

너스 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수석이 밝힌대로 문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당을 떠나지 않을 경우, 이는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민중화 이후 선출된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재임 중 혹은 퇴임 이후 소속 정당을 떠났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일: 2021. 10. 1(금)	· 전형일: 2022. 1. 10(월)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